

2018년 5월 18일

csf@kiep.go.kr

제7차 한·중·일
정상회의 주요 내용
및 평가

- 2018년 5월 9일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한·중·일 정상회의가 약 2년 반 만에 개최되었으며, 한·중·일 정상은 3국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
- 제1차 한·중·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10주년이 된 올해 열린 제7차 한·중·일 정상회의에서는「공동선언문」과「2018 남북정상회담」에 대한 특별성명을 공식문서로 채택
 - 정상회의 이후에는 공동 기자회견, 비즈니스 서밋, 양자회담이 연달아 개최됨.
 - 이번 정상회의는 3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한·중·일 협력체제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'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' 사이에 개최됨.
 - 3국간 정상회의는 2015년 이후 영토 분쟁과 정치적 문제로 인해 연기되어 왔음.

표 1. 제7차 한·중·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

구분	세부 주제	주요 내용
3국 협력	3국 협력 제도화 및 정례화	△3국 정상회의 정례화, △3국 외교부간 협의체 정례화, △3국 영사 협의체 제도화 검토
	스포츠·문화·인적 교류	△올림픽 관련 협력 강화, △3국 청년 모의정상회의 개최, △캠퍼스 아시아 사업 개최, △동아시아 문화 도시 프로그램 제공, △미래지도자포럼 활성화, △3국 문화서를 프로그램 활성화
	경제 협력	△한·중·일 FTA 및 RCEP 협상 가속화, △공급사슬연결(SCC), 전자상거래, 콘텐츠 산업 관련 협력 확대, △세관 및 운송 분야 협력 강화, △특허 관련 협력 강화, △LNG 협력 양해각서 체결, △5G 이동통신과 글로벌 로밍 관련 ICT 분야 교류 확대, △사이버 안보 관련 협력 강화, △'차이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(CMIM)' 등을 통한 역내 금융 협력 강화
	지속가능성장	△자원 효율성 추진, △역내 해양 쓰레기 및 대기오염 방지, △농업, 임업, 생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요성 강조, △원자력 안전 관련 협력 지속 △보편적 의료보장, 검역 관련 협력 강화, △3국 고령화 정책 대화 개최
	기타	△'재난관리 협력'을 토대로 협력 강화, △'2015-2030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' 이행, △3+1 협의체 구성
지역 및 국제 현안	동북아 평화 협력	△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, △북·일간의 조속한 납치자 문제 해결 희망
	동아시아지역 협력	△동아시아 역내 협의체 내에서의 3국간 공조, △동아시아비전그룹의 후속조치 이행

자료 : 제7차 한·중·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(2018.5.9.)을 토대로 정리.(재인용:「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논의결과와 향후 협력방안」, KIEP 오늘의 세계경제, 대외경제정책연구원.)

1 이종현, 2018, 「철실할 때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」, 『한겨레』, (5월 7일)

-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 이슈를 포함한 정무, 경제, 인적교류 등 3국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함.
 - 「공동선언문」은 ‘3국 협력’과 ‘지역 및 국제현안’ 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, 구체적으로 △3국 협력 제도화 및 정례화, △스포츠·문화·인적 교류, △경제 협력, △지속가능성장, △기타 및 △동북아 평화 협력, △동아시아지역 협력에 대한 평가와 협력방안을 담고 있음.
 - 3국은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, 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을 지지하고 올림픽, 청년 교류 사업 등을 통해 인적·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함.
 -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·중·일 자유무역협정(FTA)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협상 가속화를 통해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, 공급사슬연결(SCC), 전자상거래, 표준화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/무역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함.
 - 이 외에도 관세, 에너지, ICT, 금융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, 3국의 공통과제인 환경, 원자력 안전, 고령화, 보건문제에 대해서도 인적 및 정보 교류를 추진하기로 함.
- 이번 정상회의는 경제·동북아 평화 협력에 대한 3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, 과거사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.
 - 한국은 ‘판문점선언’과 북미회담에 대한 중·일의 지지를 당부하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추진력을 얻는 데 주력함.²
 - 일본은 납치자 문제가 공동선언문에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지만,³ 북한 비핵화 방법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존재⁴
 - CVID(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)를 강조하며 한·중과 입장 차이를 보임.
 - 중국은 공동선언문 내 ‘역사 직시’ 문구를 요구했으나 일본 측의 반대로 추가되지 못했으며,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3국의 경제 협력을 중점적으로 언급함.
 - 보호무역주의 배경과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해 3국이 경제적으로 협력해야하며, ‘한중일+x 협의체’를 통해 제 4국 시장에 진출할 것을 제안함.⁵ CSF

(작성자 :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동아시아팀 손원주 연구원)

2 「한중일 정상회의 '3국3색'...각국 상황 따라 미묘한 입장차」, 2018, 『중앙일보』(5월 9일).

3 「『拉致解決』初めて明記 共同宣言で成果」, 2018, 『毎日新聞』(5월 11일), <https://mainichi.jp/articles/20180511/ddm/005/010/042000c> (검색일: 2018. 5. 17)

4 「日中韓、難航した共同宣言 非核化へ温度差 道筋示せず」, 2018, 『朝日新聞』(5월 9일), https://www.asahi.com/articles/ASL594VCQL59UTFK00L.html?ref=pc_ss_date (검색일: 2018. 5. 18); 「北非核化へ道筋示せず 3カ国の関係改善、同利異夢」, 2018, 『産経ニュース』(5월 10일), <https://www.sankei.com/world/news/180510/wor1805100008-n1.html> (검색일: 2018. 5. 18).

5 “Li Keqiang, Prime Minister Shinzo Abe of Japan and President Moon Jae-in of the ROK Jointly Meet the Press”, 2018,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’s Republic of China (9 May), http://www.fmprc.gov.cn/mfa_eng/zxxx_662805/t1558610.shtml (검색일: 2018. 5. 17).